



앙골라

경제개혁 부진으로 IMF의 채무구조조치 지연될 듯

앙골라는 금년 봄 반군 지도자 사빔비가 사살된 이후 반군의 무장해제 및 전투 중지를 약속한 평화협정이 비교적 잘 준수되고 있어 30년을 끌어온 내전 종식이 현실화되고 있다. 1975년 식민 종주국 포르투갈이 앙골라로부터 철수하며 시작된 각 정파간의 무력 충돌로 포르투갈 통치 시절 건설된 도로, 철도, 교량, 항만, 공항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과 광산, 정유공장, 농업시설의 상당 부분이 파괴되었다. 앙골라에 평화의 기대가 높아지고 독립 전 수준으로 인프라를 회복하는 데 수백 억 달러의 복구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면서, 이에 대한 각국 업체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내전이 종식된 여타 아프리카 국가들과 달리 앙골라가 국제적인 주목을 받는 이유는 다이아몬드와 석유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전쟁 비용 지출이 중단되고 100억 달러수준의 대외채무 상환 부담이 경감되면, 앙골라는 전후 복구에 소요되는 자금의

상당 부분을 자체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MF와 합의한 경제개혁 조치는
사실상 실패로 끝나

그러나 이러한 전망은 석유 판매수입이 투명하게 관리되어 비정상적으로 유출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석유 판매수입의 절반 정도는 정부 예산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1999년에 석유메이저들이 지급한 9억 달러의 심해유전 조광료가 재정수입에 일절 포함되지 않은 점은 그 동안의 소문이 사실이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최근의 활발한 해저유전 개발에 힘입어 일산 80만 배럴을 유지하던 동국의 석유 생산량이 금년에는 92만 배럴, 내년에는 95만 배럴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늘어나는 석유 생산량과 비례하여 국제수지가 개선되지 않은 것은 석유 판매수입의 많은 부분이 재정수입에 귀속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관리되거나 유용되었을 개연성을 나타낸다.

이에 따라 2000년 4월부터 추진된 경제개혁조치(Staff-Monitored Program)에서 IMF는 동국의 경제개혁 초점을 재정관리의 투명성 제고에 두었다. 그러나 경제개혁조치의 이행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2001년 6월까지 IMF의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2002년 2월 앙골라를 방문한 IMF 조사단은 석유 판매수입의 상당 부분이 공식적인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외국계 은행의 역외계좌에 예치되어 비밀리에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동국 정부가 구체적인 석유 관련 통계자료 공개나 실사를 거부함에 따라 협상은 결렬되었다.

특히, 대통령 직속 편제로 운영되는 국영 석유회사(Sonangol)는 회계장부의 공표를 거부하였고, 앙골라 집권당의 사무총장인 루엔코(J. Loureco)는 금년 5월 런던을 방문하여 국영 석유회사의 회계자료 비공개 결정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였다. 게다가 산토스 대통령 역시 IMF의 자료요구를 국가 주권의 침해라고 맞서고 있어, 당분간 협상 재개의 실마리를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앙골라가 석유 판매수입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앙골라 정부는 석유 판매수입에 관한 자료 제공은 거부하였으나, 재정에 대한 회계제도 개선을 위하여 국제 회계법인인 KPMG를 선임하여 석유 판매수입의 투명한 관리와 회계 감사방법을 개발중이다.

또한, 앙골라 중앙은행은 1999년의 석유 판매수입 관련 자료를 자체 분석하였고, 2000년도 자료에 대한 회계감사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외채무 탕감 가능성은 점차 줄어들어

앙골라 정부가 경제개혁 조치의 이행에 실패하고도 IMF와의 협상을 계속하는 이유는 협상의 조기 결렬이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어, 채무탕감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상이 공식적으로 결렬되기는 하였으나, 추후 적절한 시기에 다시 동국 정부는 IMF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려는 시도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동국의 총외채는 약 100억 달러에 달하지만, 석유 가격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연간 석유 수출액만도 총외채의 80%에 육박하며, 내전이 종결되어 과다한 국방비 지출이 중단되고 재정관리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외채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96년 앙골라가 파격적인 채무탕감이 필요한 고채무빈국(HIPC)으로 선정된 이유는 석유가격이 낮았던 1993년도 석유 수출액 기준의 총외채(현재가치기준)/수출액 비율이 150%를 초과하였고, 반군이 자신들의 근거지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정부군 장악 지역을 공격하고 키토 유전을 점령하는 등 내전이 격화되고 1인당 소득이 695달러 이하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석유가격이 1990년대 초에 비해 2배 이상 오른 1999년 이후의 수출 자료

를 기준으로 하는 채무감당능력분석(debt sustainability analysis)에 의하면 앙골라는 일반적인 파리 클럽 방식의 채무구제만으로 외채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 국가(sustainable case)로 분석된다. 그렇다고 아직은 앙골라가 고채무빈국(HIPC)에 주어지는 채무탕감조치가 필요없는 나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앙골라는 채무 구제의 전제조건으로 이행해야하는 경제개혁 조치를 완결하지 못함으로써 아직 채무구제의 방식과 범위를 결정하는 결정시점(decision point)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앙골라가 이미 외채상환 감당국가로 확정된 듯한 인상을 주는 이유는 세계은행이 최근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채무감당능력을 예비 분석하여 나타난 결과를 공표하였기 때문이다.

앙골라의 결정시점은 미확정 상태이고, 만약 결정시점에서 석유가격이 하락하여 외채상환 감당국가에서 탈락한다면, 결정시점 이전은 물론 이후에 제공한 공적채무도 탕감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정시점에서 외채상환 감당국가로 분류되는 경우, 앙골라는 일반적인 파리 클럽 방식의 채무구제를 받고 HIPC에서 졸업하게 된다. 이때 앙골라의 채무구제 기준시점(cut-off date: 1986년)이 변경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 발생한 채무는 탕감받지 못한다. 그러나 가나의 경우 기존의 채무구제 기준시점을 변경하여 보다 많은 채무를 구제대상에 포함시킨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채무구제 기준시점이 1990년대 이전인 경우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채권국 입장에서는 채무구제

기준시점의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석유 시추설비와 전후 복구 사업에 대한 관심 높아져

그 동안 석유를 주로 생산해온 콩고 강 하류에 위치한 카빈다 유전지대 이외에 앙골라 본토 연안의 해저 유전이 속속 개발되면서 ㄱ잠수식 시추 설비와 운반선, 정제시설 등 석유관련 시설재의 발주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우리 업체들의 수주도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후 복구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후 복구시장을 선점하려는 각국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각국 수출신용기관들은 여전히 앙골라가 HIPC에 포함될 것을 우려하여 지원불가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석유개발 컨소시엄의 석유 수출대금이 역외계좌로부터 수출자에게 직접 입금되어 자금회수가 거의 확실한 거래는 예외적으로 지원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앙골라 국영 석유회사를 차주로 하는 거래를 지원할 경우에는 채권을 탕감해 주어야 할 가능성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앙골라는 시장진출의 기회와 자금회수의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시장으로서 자금회수가 불확실한 점은 분명히 지원의 걸림돌이기는 하지만, 진출 기회가 열린 얼마 되지 않는 시장임을 감안하여 앙골라에 대해서는 위험과 기회를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韓明煥】